

【 2015.05.21(목) 강원일보 】

“300억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배제해야”

건설업계 관련조례 개정 촉구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 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의무화했다.

또 2016년 12월31일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기준이 상위 규정을 따라가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도내 지자체의 조례 개정 요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위법에 이미 실적공사비 폐지 및 한시적 적용 배제 등이 확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자체 조례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2015.05.21(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항고소송 중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Q 발주처 A는 신축건물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 이에 참가한 B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 A는 B회사가 정해진 공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회사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진행 중 발주처 A는 B회사의 현장소장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원래 고지하였던 사유 이외에 별도의 다른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원래의 처분사유와 추가하는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8두18565 판결).

발주처 A는 B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단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로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는 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발주처 A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 중에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 신설 구성원 시공실적 단순 합산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확정된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중심제) 특례 운영기준 개정안'은 시공여유율 대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는 등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배점과 상호협력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유인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낙찰자 선정기준을 보완한 A기준과 단가심사를 폐지한 B기준 시행 근거를 모두 담고, A기준은 기존 균형가격 만점구간을 적용한 A-1 기준과 균형가격 만점구간을 없애고 균형가격을 전후로 모두 점진적으로 감점하는 A-2기준을 반영했다.

또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실적 심사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따른 배점(1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는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경우 단독이면 0.85점, 구성원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은 0.9점, 20% 이상 30% 미만은

입찰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 최저가제와 참여업체 비슷 낙찰률 78% 전후 형성될 듯

0.95점, 30% 이상은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단독이면 0.9점을, 구성원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은 0.95점, 2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매기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구성원 비율에 상관없이 1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배점을 신설함에 따라 규모별 시공역량 배점은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 기본배점을 종전 4.5점에서 3.5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 가점(0.2점)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건설인력 고용과 건설안전 가점은 기존 0.4점에서 0.3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상호협력 점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조정계수의 20%로 나는 값에 만점인 0.2점을 곱해 산정하되, 조정계수는 공사규모와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부터 1 범위에서 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른 발주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말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를 1년간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입찰공고일이 속한 연도를 제외한 최근 2개 연도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 최저가 낙찰제와 비슷한 개수의 업체 참여가 가능하고 낙찰률은 78% 전후에서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의정부 민락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는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과 민락동 일원에 연면적 3만5113.22㎡의 행복주택 812가구와 연면적 1만51.2㎡의 부대복리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353억원,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725일간다.

채희찬기자 chc@

‘온기’ 도나 싶더니… 건설시장 또 ‘냉기류’

국토부·공공기관 지난달 SOC 예산집행 큰폭 감소

KDI, 올 건설투자 전망치 4.7%→2.9%로 하향 조정

올 들어 훈풍이 불었던 건설시장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이 상승 탄력을 받다가 싶더니 2분기 들어서자마자 다시 고꾸라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4.7%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2면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정 집행 실적은 4조1362억원으로 전월(5조2994억원) 대비 21.9%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 1월 2조4329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이후 2월 실적이 3조1031억원으로 전월보다 30% 가까이 증가하고 이어 3월에는 5조원을 웃돌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재정 집행 실적이 4조원선으로 하락하면서 재정집행률도 중앙부처 평균(40.4%)보다 낮은 38.9%에 머물렀다.

공공기관의 지난달 SOC 예산 집행 감소폭은 더욱 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 집행 실적은 576억원으로 전월(3859억원) 대비 무려 85.1% 급감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전월(7386억원)보다 79.0% 감소한 1554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도 재

정 집행 실적이 각각 1334억원, 3054억원으로 전월(5415억원·1조2334억원)보다 75.4%, 75.2% 축소됐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주로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집행 실적도 사실상 반토막 났다.

올 3월 1조1064억원을 집행했던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5619억원(-49.2%)을 투입하는 데 머물렀고 도로공사도 2534억원의 실적으로 전월(4697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SOC 재정 집행 실적의 둔화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건설수주의 증가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KDI는 이날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건설투자를 2.9%로 1.8% 포인트 낮췄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건축 부문의 증가세 유지와 토목 부문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서는 토목 부문의 부진 완화 대목이 아예 빠졌다.

올해 SOC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건설투자의 뚜렷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도 시원치 않은데 되레 감소하면서 건설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민간연구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내놨던 KDI가 올해 건설투자를 2%대로 하향 조정한 것도 그만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